

외국인 ‘공매도’, 글로벌IB ‘낙관론’… 요동치는 코스피

글로벌 IB, 코스피 8000선 전망
외국인 투자자 위한 작전 의혹에
“짜고치는 고스톱은 불가능” 일축
휘둘리지 않는 체질개선 필요성
다음 산업 부재… 구조 변화해야

최근 외국인들의 셀 코리아(한국 주식 매각)가 이어지는 가운데,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이 한국 증시에 대해 긍정적 전망을 잇따라 내놓고 있어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지난 18일 모건스탠리가 코스피에 대해 “2년 내 7500~8500 수준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모건스탠리는 “지정학 상황이 언제 완화될지는 불확실하지만, 한국의 기업 개혁이 지속적으로 진전되는 테마가 될 것으로 본다”면서 이 같이 전망했다. JP모건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코스피 강세장 시나리오를 가정해 지수 목표치를 7500으로 제시했고, 씨티그룹도 올해 코스피 목표치를 기존 5500에서 7000으로 상향 조정했다.

◆“한국 증시, 개혁과 반도체가 이끌 것”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라는 악재에도 올해 코스피지수는 10% 남짓 올랐다. 뉴욕 증시의 S&P500 지수가 올해 10%가량 올랐고, 일본 닛케이지수는 10%, 중국 상하이종합지수도 10% 오른 것과 비교하면 크게 앞선다. 외국인 IB들이 한국 증시 비중 확대를 추천하는 이유는 구조적 기업 개혁과 반도체 호황을 든다.



ChatGPT로 생성한 ‘롤러코스터 장세가 지속되고 있는 코스피’ 관련 이미지.

모건스탠리는 “한국 주식시장은 전세계적 지정학적 리스크 고조와 에너지 가격 압박 속에 최근 고점 대비 의미 있는 조정을 겪었다”며 “동시에 국내 구조적 기업 개혁 속도는 꾸준히 유지되고 있으며 정책 이니셔티브가 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분석했다. 정부의 자본시장 및 지배구조 개혁 정책 추진과 관련해 “큰 틀의 작업이 완료된 만큼 이제 정책의 균형에 더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며 상속세 개혁과 추가적인 자본 관리 인센티브가 포함될 것으로 봤다. 모건스탠리는 “국민연금과 기관 투자자들이 주주 행동주의에 적극 참여하면서 이해관계자의 참여 확대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짚었다.

노무라에 최고치인 8000을 제시했다. 노무라는 코스피 상장사의 주당순이익(EPS)이 올해 129%, 내년 25%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올해 1월(각각 96%, 23%)과 지난해 12월(각각 47%, 20%) 전망 대비 크게 높아진 수치다. JP모건은 양사의 올해 EPS가 현 컨센서스를 최대 40% 웃돌 수 있다고 봤다. 목표주가 역시 45~50% 상승 여력이 남아 있다고 분석했다. 신디 박 노무라 연구원은 “메모리 기업들이 2026년 한국 전체 순이익의 64%를 차지해 성장의 중심축이 될 것”이라며 “기업 지배구조 개혁이 실질적으로 이행되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로 8000 선 돌파도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반면 외국인 IB들은 ‘잘나가는’ 미국 증시에 대해서는 신중한 의견을 내놓았다. 골드만삭스는 보고서를 통해 미국 증시가 ‘위험한 임계점’에 도달했다고 진단했다. 실제로 S&P 500 선물 시장에서는 10년 만에 최대 규모의 순매도가 발생하며 기관 투자자들이 급격히 몸을 사리는 모습이다. 지난 2년간의 데이터를 분석해 보면 위기감은 더욱 뚜렷하다. 기관들의 자금 흐름을 나타내는 순포지션이 2200억 달러 수준까지 급감했다. 이는 지수가 5000포인트 아래로 무너졌던 2024년 10월의 하락 패턴과 매우 유사하다. 골드만삭스는 결국 증시의 향방이 ‘유가’의 안정 여부에 달려있다고 분석했다.

◆일각에서는 ‘짜고 치는 고스톱’
글로벌 IB들의 한국 증시 추천에 대해 의심하는 시각도 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시장에서 발을 쉽게 뺄 수 있도록 일부러 장밋빛 전망 보고서를 내놓은 게 아니냐는 것이다. 지난 2018년 글로벌 IB들이 한국 바이오주에 대해 ‘매도’ 리포트를 잇따라 내놓으면서 주가가 급락했고, 공매도한 외국인 투자자들이 결과적으로 이익을 보면서 개인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작전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실제로 이달 들어 20일까지 외국인 투자자들은 유가증권시장(코스피)에서 15조9555억원 순매도했다. 가장 많이 판 종목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였다. 외국인 비중이 66%를 넘는 공매도도 급증했다. 같은기간 코스피의 일평균 공매도 거래대금은 1조9409억원으로, 지난달 1조3440억원 대비 44.4% 급증했다. 이 기간 동안 거래대금 기준 공매도 상위 종목은 삼성전자(10조4475억원)와 SK하이닉스(5조5954억원)가 차지했다.

외국계 증권사 관계자는 “전문가들이 객관적으로 분석한 것일 뿐, 다른 의도는 없다”며 가능성을 일축했다. 국내의 한 증권사 리서치센터장도 “리서치 부문과 트레이딩(매매) 부문은 엄격히 분리돼 있기 때문에 ‘짜고 치는 고스톱’은 불가능하다”면서 “외국계뿐만 아니라 다수 국내 증권사도 올해 워낙 반도체 업황 전망이 좋기 때문에 당분간 한국 증시가 반등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시장 전문가들은 외국인에 휘둘리지 않는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김상봉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반도체 수퍼 사이클이 끝나게 되면 산업보다 빨리 움직이는 자본시장 쪽에서 먼저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현재는 반도체 다음 산업이 부재하다”며 “정부가 기업 거버넌스 체계 개편, 구조조정 움직임, 주주환원 기조 등을 꾸준히 유지하면서 중장기적인 성장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평가했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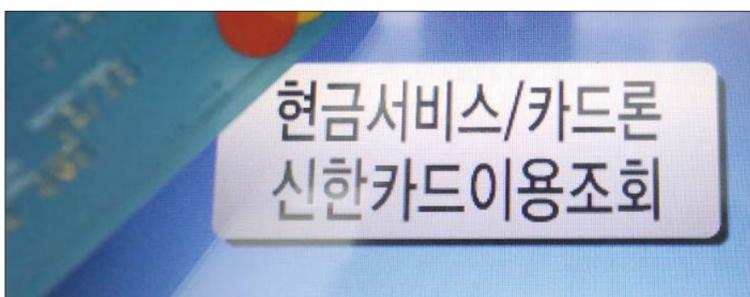
metro

지난달 카드론 잔액 3171억 급증… 대환대출도 확대

지난달 잔액 42조9022억 집계
대출 규제·경기둔화 맞물린 결과
대환대출 잔액 1.5조… 758억 ↑

서민들의 급진 창구인 ‘카드론’ 잔액이 지난달에도 늘며 43조원에 육박했다. 카드론 대환대출 잔액 증가세도 함께 관측되고 있다. 경기침체에 생활고를 겪는 차주들이 늘어나면서 카드론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모습이다.

22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2월 말 기준 국내 9개 신용카드사(삼성·신한·KB국민·현대·롯데·하나·우리·비씨·NH농협)의 카드론 잔액은 42조9022억으로 집계됐다. 전월 말 잔액인 42조



서울 시내 한 현금자동입출금기(ATM) 기계에 표시된 카드론 문구. /뉴시스

5850억원 보다 3171억원 증가했다. 카드사별로 살펴보면, 신한카드가 8조1605억원으로 잔액 규모가 가장 컸다. 삼성카드가 6조7624억원, KB국민카드가 6조4279억원, 현대카드가 6조985

억원, 롯데카드 4조9227억원, 우리카드 4조2560억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NH농협카드 3조3077억원, 하나카드 2조9289억원의 수준을 보였다. 실제 카드론 잔액은 급증하고 있는 추

세다. 지난해 카드론 잔액은 전년 대비 약 8조원 늘었다. 지난 2023년 마이너스(-)1조9000억원, 2024년 플러스(+)2조6000억원으로 증감을 보인다. 지난해 8조원으로 증가폭이 커진 것. 1년 새 증가 규모가 3배 이상 급격하게 커졌다.

올해 월별 증가 흐름도 지속되고 있다. 올해 카드론 증가폭은 지난 1월 2557억원에서 2월 3171억원으로 확대됐다. 일각에서는 시중은행 대출 규제에 따른 ‘풍선효과’와 경기 둔화로 인한 불황형 대출 수요 증가 추세가 맞물린 결과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다만, 2월의 경우 설 연휴 전후의 일시적 자금 수요가 반영됐을 수 있다는 시각도 제기된다.

문제는 카드론 대환대출 잔액 증가 현상도 함께 관측되고 있다는 것이다.

대환대출은 기존 카드 대출 상환을 위한 신규대출을 의미한다. 지난달 카드론 대환대출 잔액은 1조5399억원으로 집계됐다. 전월 대비 758억원 증가했다. 지난해 8월 이후 6개월 만에 가장 큰 규모다.

전체 카드론 잔액 대비 증가 속도도 가파르다. 지난달 전체 카드론 잔액이 전월 대비 0.8% (42조5850억원→42조9022억원) 증가한 가운데 대환대출 잔액은 5% (1조4641억원→1조5399억원)대 수준으로 증가했다.

한편, 지난달 현금서비스 잔액은 6조193억원으로 전월 대비 803억원 감소했다. 결제성 리볼빙 이월 잔액은 6조8353억원으로 같은 기간 1159억원 증가했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



metro

금감원, ‘사전차단’으로 소비자 보호… 빗투·ELS 등 점검

자금 쏠림·시장 변동성 확대 속
투자 경험 부족 청년층 리스크 노출
SNS 자본시장 교란행위 단속도

금융감독원이 소비자 피해 대응 방식을 ‘사전 차단’ 중심으로 전환한다.

23일 금감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20일 제1차 소비자위험대응협의회를 열고 최근 자금 쏠림과 시장 변동성 확대 속 소비자 위험요인을 점검했다. 해당 협의회는 금감원장 주재 최고위 협의체로, 위험요인 발굴부터 검사·제재까지 연결하는 상시 대응체계로 운영된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사진)은 “그간 사후 규제 중심이던 소비자 보호 방식에서 벗어나 소비자 입장에서 피해 우려요인을 사전에 인지하고 보다 기민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이 가장 크게 본 리스크는 레버리지 투자 확대다. 협의회 후 백브리핑에서 이세훈 수석부원장은 “빗투를 신용융자만으로 보면 실제 위험을 제대로 보기 어렵다”며 “여러 금융권에 걸친 레버

리지 자금을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총량 규제에는 선을 그었다. 그는 “신용대출이나 마이너스통장은 투자 목적의 사용도 많아 일괄적으로 규제하기는 어렵다”며 “총량을 직접 관리하기보다는 금융회사들이 변동성 확대를 반영해 신용심사를 더 엄격히 하도록 지도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학자금 대출 등 일부 자금이 투자로 흘러가는 문제에 대해서는 “규모는 크지 않더라도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종합적으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 고령층 중심으로 신

용융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 “최근 고령층은 자산 규모도 크고 투자 접근성도 높아 단순히 취약계층으로 보기 어렵다”며 “오히려 투자 경험이 부족한 청년층이 더 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주거연계상품 판매 확대에 대해서는 강한 경고가 나왔다. ETF 신탁, ELD 등 실적연동형 상품 판매가 급증하는 가운데 금융회사의 실적 경쟁이 불완전판매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이다.

이 수석부원장은 “ELS의 대체상품을 특정하기보다는 은행에서 판매되는 실적연동형 위험상품 전반을 보고 있다”며 “상품 자체보다 판매 과정에서의 설명부실이나 이해 부족이 문제”라고 짚었다.

전산사고 대응도 강화된다. 그는 “최근 사고들은 복잡한 원인보다 기본적인 관리 소홀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런 경우 감정을 최소화하고 금전적 제재를 강화해 금융회사들이 사전에 투자와 통제를 강화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원장은 유튜브·SNS 인플루언서 등을 통한 자본시장 교란 행위와 관련해 “업권 전반을 아우르는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 적시에 적발·근절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금융상품이 복잡·고도화되는 흐름에 맞춰 금융 소비자 교육 강화 필요성도 함께 강조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



metro